



# 양계 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 육계 비품 줄이면 농가소득 향상된다 상차반에 의한 손실을 큰 것으로

닭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닭 사육과정이나 닭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품가치가 없는 닭들(일명 비품)을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경우 그 피해를 크게 줄여 농가는 물론 도계장에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금학회 춘계심포지움에서 올품의 신계돈 부장은 '도계육 품질저하에 의한 육계산업의 영향'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연간 비품으로 손실되는 금액은 1년에 300억원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한 곳을 감안하면 그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계육 품질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경우 이를 농가소득으로 환원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비품은 농장사육과정(Farm)에서 발생하는 비품(F)과 상차과정과 운송과정(Catching&Carry)에서 발생하는 비품(C)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품 F는 무류, 배꼽, 피부손상, 흥계(식물 닭), 비규격품이 이에 해당되고, 비품 C는 날개 멍, 날개골절, 가슴 멍, 피부손상, 다리 멍 등이 이에 속한다.

이중 상차반에서 생기는 비품율이 6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상차반(작업자)들이 닭을 모으는 과정과 어리장에 싣는 과정에서 주의만 하면 비품율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날개가 부러지거나 멍이 생기는 경우가 전체 비품율중 4.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상차반들에게 홍보 및 지도를 통해 비품율을 충분히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농장관리에서 나타나는 비품중에는 주로 겨울철(특히 12월)에 많이 나타나는데 무류손상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장에서의 비품율을 줄이는데는 환경개선을 최우선으로 꼽았는데, 환경이 나쁘면 닭들이 활동이 적고 주저앉는 경향이 많아 비규격품은 물론 무류이나 배꼽 등에 상처가 생겨 닭고기로서의 상품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사양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계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점에서 단 1%의 생산비를 줄이는 노력은 농장은 물론 범업계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 동물복지 현실로 다가선다

### 개정된 동물복지법 내년부터 발효

지난달 한 동물복지 단체에서 개최하는 '농장 동물복지 포럼' 현장에 기본 적이 있다. 이 단체는 그동안 반려동물(애완동물)에 국한하여 펼쳐오던 동물복지 운동을 농장까지 확대하여 펼쳐나갈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날은 양돈에 초점이 맞추어져 포럼이 이루어졌지만 다루어지는 내용중 양계장에서의 동물 학대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포럼 시작전에 보여준 동영상은 3년여간의 치밀한 연구와 촬영을 통해 좁은 공간에서 자라고 있는 돼지의 고통스러운 사육장면은 물론 불량한 환경에서의 생활, 항생제를 대량 투여하는 통계 제시, 심지어 도축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의 과격한 몰이방법 소개 및 고통받으며 전기충격 방법으로 쓰러져 떨고 있는 장면까지 일반 소비자들이 이를 보았을 때 도저히 돼지고기를 입에 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의 충격적인 장면들이 소개되었다.

EU에서 초청받은 동물복지 단체 관계자는 AI 발생이 닭들을 집단 사육하는데 기인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A4용지를 1/3로 접어 들어보이며 닭들이 이 좁은 공간에서 '강금' 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AI발생과 관련하여 지난해 모 교수가 사설을 통해 닭들은 오직 계란생산을 위한 기계로 전락한 '괴물' 이라고 표현해 분과한 적이 있지만 동물복지 단체들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말들은 앞으로 우리 업계에 큰 파장으로 다가서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동물복지단체는 법인 허가를 받은 3개 단체((사)한국동물복지협회, (재)한국동물보호협회, 동물학대방지연합회)를 포함하여 10여개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일부는 국제동물보호단체들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다. IET(국제수역사무국)에서는 이미 동물에 대한 운송, 도축, 살처분,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EU에서는 구체적으로 닭 케이지 사육금지(2012년까지) 등을 명시하며 동물복지에 대한 열의를 높여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처음 동물복지법이 만들어진 이후 지난 1월 26일 보다 강화된 법으로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의 적용을 앞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동물학대 금지행위 범위 구체화 및 벌칙강화가 주 내용이며, 앞으로 선진국에서의 복지정책을 주시하며 추진해 나간다는 장단기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미 금년부터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산란계의 경우 케이지에서는 마리당 0.042제곱미터, 평사 0.11제곱미터를 확보해야 되고, 육계의 경우 케이지에서는 0.042제곱미터, 무창 0.046제곱미터, 개방 0.066제곱미터를 확보해야 된다.

하지만 이 또한 동물복지 단체들은 닭들이 활동하기에 충분한 공간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부리자르기 금지, 케이지 사육 금지 등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유기, 무항

생제 인증 및 사육도 이와 전혀 관련이 없지 않기 때문에 동물복지에 대해 간과하지 말고 주시하며 양계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 한·EU FTA 협상 본격 돌입

### 한·미 FTA 협상 결과 매듭이 급선무

지난 5월 7~11일 서울에서 제1차 한·EU FTA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지난 4월 2일 타결된 한·미 FTA 협상 결과가 매듭되기도 전에 서둘러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대해 국내 농축산업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차 협상에서는 협상 분야별 기본적 입장을 밝히고 6월말쯤 양측의 개방수준을 담고 있는 양허안을 교환키로 하였으며,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보호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미 FTA와는 다소 다른 측면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3차 협상은 9월에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U는 전세계의 최대농산물 생산국이면서 우리나라와의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지역이다. FTA 체결시 EU산 농산물 주력품목인 돼지고기, 가금육류(닭고기), 낙농품, 가공농산물 등의 수입이 증대되어 국내 농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도 수입된 가금산물중 닭고기는 4,800만 달러로 전체 수입량의 4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수입가격은 kg당 2,071원으로 국내산 kg당 4,825원에 비해 43% 낮은 가격에 들어왔다. 이때는 2003년도 이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미국, 태국, 중국의 수입선이 덴마크 등 EU 국으로 옮겨가면서 수입의존도가 높았지만 FTA가 타결되면 언제든지 닭고기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이미 한·EU FTA를 준비해 왔던 것은 사실이나 미국과의 협상결과가 매듭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가들은 매우 당황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정부 및 연구기관에서는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따른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축소, 발표하는가 하면 폐업보상금 지원 대책 등을 내놓으면서 축산농가들을 안심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의견들이 분분하다. 한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향후 15년까지 관세가 점차적으로 철폐될 경우 닭고기가 707억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수치에 비해 피해액이 낮게 발표되면서 산출방법 및 근거에 의혹마저 들게 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의 협상 결과에 따라 6월까지 국내 보완대책을 구체화 한 뒤 이를 토대로 금년까지 농업인 단체, 관계부처 등 의견을 수렴하여 FTA 특별법 개정 및 지원금 규모를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한·EU FTA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농가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피해규모와 대책을 명확히 하고 한·EU FTA협상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양계**